

(첨부)

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(3.4~3.10)

1 경제일반

1. 일본 경기 후퇴국면 진입 우려

- 3.7(목) 발표된 1월 경제동향지수의 기초판단이 ‘하방으로의 국면변화’로 하방 수정되어, 일본 국내경기가 이미 후퇴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됨. 가장 큰 원인은 중국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수출 및 생산이 지난 1월 크게 하락했기 때문임.
- 내각부가 7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지수(2015=100) 속보치에 따르면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일치지수가 전월보다 2.7포인트 하락한 97.9포인트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, 이는 5년 7개월만의 낮은 수준임.
-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공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의 경기 확대기간이 74개월(12.12월~, 6년 2개월)에 이르러, 전후 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보였고, 2월 보고에서도 경기전체가 ‘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’고 판단함. 그러나 2월 하순 공표된 1월분 경제지표에서는 중국경제의 감속이 일본경제에 파급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재차 확인됨.
 - 1월 무역통계에서 일본의 수출총액 중 20%를 차지하는 對중국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7.4% 감소한 9,581억엔을 기록했고.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3.7% 감소함.
- 경기가 확대 또는 후퇴 국면인지에 대해 정식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가 될 것임.
 - 동 판단은 ‘경기동향지수연구회’에서 광공업생산지수 등 9개 지수의 월별 동향을 분석해, 9개 지표의 △하락폭 및 △하락 정도가 △일정기

간 지속되는지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함.

- 시장관계자 사이에서는 ‘작년말 경기후퇴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.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.

2. 日 정부, 소비세율 인상관련 포인트 환원제도 구체안 발표

- 3.5 日 경제산업성은 10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 실시될 비현금결제(캐시리스)에 대한 포인트 환원제도* 관련 구체 실시방안을 추가 발표함.

* 2018.10~2020.6까지 9개월 간 중·소규모 매장에서 비현금결제를 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5%의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로 결제사업자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기초 자금은 일본 정부가 보조함.

- **(과잉보조 방지)** 정부는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최대 40%에 이를 것으로 보고, 실효율(유효기간 내 미사용되어 소멸되는 포인트비율)을 감안해 결제사업자에게 포인트 제공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 예정
 - ※ 과거 실효율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, 과거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실효율 40%를 상정할 예정이며, 신형 IT 기업 등이 제공하는 포인트는 직접 물건구매시 이용이 가능해 실효율이 10%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음.
- **(포인트환원대상 제한)** △환금성이 높은 상품권, 어음, 선결제카드, △ ‘사회통념상 부적절한’ 유흥업소, △별도 감세조치를 실시 예정인 자동차 및 주택, △비과세인 의료비,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은 포인트 환원대상에서 제외됨.
- **(기타)** 중소가맹점에 대한 높은 카드수수료율이 비현금결제시의 포인트 환원대책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, 포인트환원대책 실시기간 중 카드수수료율을 3.25% 이하로 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함.
 - 아울러,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 카드결제수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중소가맹점이 많은 점을 감안, 환원책 종료 후 수수료 변경가능성을 사전 공지할 것을 요청

- 포인트 환원제도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을 방지하고 비현금결제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, 제도가 복잡하여 혼란이 우려됨.

3. 日 총무성 통계위원회, 매월근로통계 추가보고서 비판

- 日 총무성 통계위원회는 3.6일 ‘매월근로통계’의 조사방법 부정 문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 특별감찰위원회가 지난 2.27일 본 사안의 경위 및 재발방지책 등에 관해 제출한 추가보고서의 설명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, 후생노동성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함.
 - 이날 통계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 상에는 ‘(본 사안의)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’는 의견과 함께 ‘조사 당사자가 부적절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게 된 통계기술적 및 학술적 이유와 총무성 통계위원회에 비밀로 복원 처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없다’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재발 방지책 강구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비판함.
 - 동 의견서에 대해 통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한 바, 동 위원회의 니시무라 기요히코(西村清彦) 위원장이 본 의견을 후생노동성 측에 전달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함.
 - 대학교수 등이 소속된 日 경제통계학회는 3.6일 매월근로통계 부정 문제에 대하여 ‘진실성이라는 존립 기반을 뒤집는 것’이라 비판하며 ‘통계 관계 기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사명을 인식하기 바란다’고 촉구함.

4.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관련 동향

- 도카이 제2원전*(이바라키현, 출력 110만kw)을 운영하는 일본원자력발전(이하 일본원전)의 무라마쓰 마모루 사장은 원전 재가동 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6개 시촌(市村) 대표와 면담을 갖고, 동 원전의 재가동 방침을 전달함.

※ 2018.3월 6개 시촌과 일본원전은 원전 재가동 시 30km권 내의 14개 시촌 중 6개 시촌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.

* 도카이 제2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쓰나미 피해로 한 때 외부전원을 상실했던 ‘피해원전’으로 원전의 법정 수명기한을 20일 앞둔 2018.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新규제기준 ‘적합’ 판정을 받아 동년 12월 최장 연장기간인 20년 연장 승인을 받음.

- 다만, 약 96만 명이 거주하는 원전 인근 30km권 내의 피난계획 수립은 거의 진척되지 못한 상황으로, 면담 후 대표단 측은 일본원전의 일방적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안전협정에 근거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.
- 3.4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관련, 동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전력회사 및 거대 은행에 의한 3,000억 엔 규모*의 안전대책비 자금지원계획안이 확인됨.
 - * 당초 예상 안전대책비 : 1,740억 엔
 - **(재가동 전)** 동 계획안에 따르면 재가동 전 2022년 말까지 필요한 지원액은 약 1,200억 엔으로, 수전비율에 따라 △도쿄전력HD가 80%인 약 960억 엔, △도호쿠전력이 20%인 약 240억 엔을 부담하기로 함.
 - **(재가동 후)** 재가동 후인 2023년 이후에 필요한 지원액은 약 1,800억 엔으로, 원전이 일본정책투자은행 및 거대은행 등 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형식으로 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며,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도쿄전력HD가 약 960억엔, 도호쿠전력이 약 240억 엔의 채무보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.
 - 간사이, 주부전력, 호쿠리쿠 등 각 전력회사는 총액 약 600억 엔의 채무 보증을 검토할 전망이다, 도카이 제2원전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한 주주 반발이 예상.
 - ※ 상기 3사는 쓰루가 원전 제2호기(후쿠이현, 가동중지)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동 자금지원에 참여한 것으로, 쓰루가 2호기의 원자로 건물 바로 아래 활성단층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가동이 어렵고 전력을 공급받을 전망은 낮음
 - 또한, 재가동에 필요한 주변 자치단체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만일 합의를 얻지 못해 폐로가 결정될 경우 지원에 참여한 각 전력회사 등은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함.

- 또한,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질 국유화 된 도쿄전력HD이 급변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.

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

5. 2019년 1월 고용통계

- 일손 부족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구인 의욕이 왕성하여 유효 구인배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.
 - **(취업자)** 취업자(6,628만명)는 전년 동월 대비 66만명(1.0%) 증가하며 73개월 연속 증가
 -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(3,474만명)이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(0.8%) 증가(50개월 연속 증가) / 비정규직(2,154만명)은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(1.7%) 증가(16개월 연속 증가)
 - **(고용률)** 전체 고용률은 59.7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상승, 15~64세 고용률은 76.8%로 전년 동월 대비 0.9%p 상승
 - **(경제활동참가)** 경제활동참가율(61.2%)은 전년 동월 대비 0.7%p 상승
 -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(6,793만명) 71만명(1.1%) 증가, 비경제활동인구(4,294만명) 78만명(1.8%) 감소
 - ※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
 - **(실업)** 완전실업자수는 166만명으로, 전년 동월 대비 7만명(4.4%) 증가
 - 완전실업률(계절조정치)은 2.5%로 전월 대비 0.1%p 상승
 - **(유효구인배율)** 유효구인배율(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)은 1.63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
 - 정규직 유효구인배율(계절조정치)은 1.14배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

유지했으며,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(계절조정치)은 2.48배로 전월 대비 0.08p 상승함

- 일본 주요 언론은 고용 정세 관련,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 직장을 떠나는 인원이 여성을 중심으로 늘어나 실업자가 증가했다고 하며, 고용 정세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.

3 대외경제 동향

6. 일미 무역협정협상 4월 개시 가능

- 라이트하이저 USTR의 '3월 일미 무역협정협상 개시' 언급 관련, 일본 정부는 3월은 국회 심의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4월 이후 모테기 경제재생대신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개시하는 일정안을 2.28 미측에 전달했다고 함.
 - 5월 하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前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크며, 제 1차 일미 무역협상에서는 협상범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.
 - 상기 관련,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일미 무역협정에 '환율조항' 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, 미국이 동 조항을 근거로 '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통화약세 유도' 라고 비판할 가능성을 우려
 - ※ 2018.9월 일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환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, 일본 정부는 환율은 양국의 재무장관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
 - ※ 라이트하이저 USTR은 2.27 하원 공청회에서 '3월 일본을 방문해 일미 무역협정 관련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.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는 환율 문제가 있다'고 언급

4 기타

7. 日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, 국내외 13개 공장 일시 생산중단 결정

□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차재용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일본 국내외 13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임.

○ 일본 국내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‘전(前)공정’을 담당하는 6개 공장 전체의 생산이 최대 두 달간 중단되며,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‘후(後)공정’을 담당하는 일본 국내외 7개 공장도 4-9월에 걸쳐 몇 주간 생산이 중단될 예정임.

○ 동사의 주력상품은 자동차 및 가전, 산업기기의 제어 중추가 되는 ‘마이콘’으로 불리는 반도체이나,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에어컨,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對中 수출이 급감한 바, 감산을 통해 재고 수준 적정화를 도모코자 함.

※ 동사의 2018년 12월기 연결매출액은 전기대비 3% 감소한 7573억 엔, 최종손익은 29% 감소한 545억 엔을 기록하였으며, 2019년도 생산은 전년도 대비 10% 이상 줄어들 전망임.

- 또한, 2018년 美 반도체 업체 IDT를 6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해외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, 일본 내 비용구조 강화를 위해 2019.6월을 목표로 그룹사원 5%에 해당하는 약 천명 규모의 인원 삭감을 실시할 방침임.

□ 중국 경기감속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,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○ 세계반도체시장통계(WSTS)에 따르면 2018년 시장규모는 4,68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4% 증가했으나, 2019년은 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다.